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 주간 북한경제 동향

##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8년 12월22일(월)  
통권1호(제1권 제21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화 02-782-2677  
팩스 02-3452-2312  
이메일 master@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시론 이 시론은 남북의 여러 사안에 대한 북한투자전략연구소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 동아시아 물류주도권의 관건, 나진-하산 프로젝트

동아시아는 세계 외환보유고의 52%, 세계 GDP 18%를 차지하면서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한 지역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 극동러시아와 몽골의 풍부한 자원, 일본과 한국의 기술과 자본력 등 상호 비교우위를 결합하면 엄청난 성장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물류산업은 경제적으로는 황금알을 낳는 비즈니스가 될 뿐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협력, 나아가 경제통합에 핵심 매개이자 중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의 물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 홍콩 등 관계국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륙운송을 TSR이나 TCR에 의존해야 하는 특성상 이 지역 물류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은 크다. 그러나 이것이 곧 이 지역의 모든 물류 주도권을 이 두 나라에 맡길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을 잇는 TKR이 완성되면 TSR 혹은 TCR과 연결되는 우리나라도 물류의 시종착지로서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양운송과 대륙운송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도 자격은 충분하다.

북한 나진항을 개발하여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과 철도로 연결, TSR을 물류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 물류 주도권 확보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즉, 나진항이라는 천혜의 항만을 갖춘 북한과 물동량 및 자본, 기술을 갖춘 한국이 함께 힘을 합한다면 TKR과 TSR 및 TCR을 연결하는 대륙운송은 물론 대륙운송과 해상운송을 잇는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 허브 구축도 가능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나진-하산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지난 10월 4일 실제 공사에 착수했을 정도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협력관계가 순항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2007년 6월 6개 물류회사가 루크로지스틱스라는 컨소시엄을 출범 시킨 이후 좀처럼 참여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열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철도공사는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를 촉구해 왔지만 정부는 분명한 의사 표명을 미

루고 있다. 더욱이 지난 9월말 러시아 방문 때 이명박 대통령은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대체재로 오해될 수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 한국전용항 계획을 발표하여 더 큰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월 15일 매우 의미 있는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대륙물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동아시아 교통인프라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세미나가 그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로 나선 한국교통연구원의 원동욱 박사와 인천대학교 성원용 교수는 나진항이 여타 러시아 극동항에 비해 모든 면에서 월등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개발 의지를 표하고 있는 포세이트항은 수심이 낮고, 현재 벌크항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항으로 개발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여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 역시 러시아 매찰사가 독점적으로 소유하며 석탄 수출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에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철도기술연구원의 나희승 박사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안병민 박사도 물류 주도권 확보에 필수적인 독자적인 운송사업권 확보가 가능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국익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토론자들은 해동기로 공사가 재개될 내년 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투자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나진-하산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사업 주체가 아닌 단순한 지분 투자자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이러한 전문가의 주장에 대해 세미나의 공동개최자인 조정식 의원은 정책 제안을 통해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단순히 개별 프로젝트 차원이 아닌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각된 동아시아 지역 물류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하지만 관건은 역시 이명박 정부에 달려 있다. 동아시아 물류 주도권 확보라는 프로젝트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한 바탕 위에 한국 정부가 사업 주체로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렵게 확보한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시한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 ▶제21호 목 차

### 이주의 칼럼

기다리는 MB, 기다리지 않는 북미 ----- 2

### 이주의 주요 기사

“3년간 개성공단 경제효과 투자대비 3~4배” ----- 3

미국 “WFP 통한 대북 식량지원 계속한다” ----- 4

北, 정보화시대 외면 못하고 이동통신 재개----- 5

북핵·남북관계 담보로 대북물자 ‘겨울잠’ ----- 6

“10월 이후 7개사 개성공단 입주계약 취소” ----- 7

北, 세계금융위기에 ‘민족경제 자립성’ 강조 ----- 8

이집트 오라스크, 北 이통·건설·은행 진출 ----- 9

평양 상점들에 휴대폰 가입 광고물 ----- 10

INTERVIEW-Aid loss to hurt North Korean economy- expert----- 11

北の動向に注目 21年 公安庁、回顧・展望 ----- 11

추천논문 / 동북아 교통물류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우리의 과제 12

함께 보는 최근 북한단신 / ----- 12

###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 ●통일교육협의회 제13차 통일교육포럼

▶주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발전 방향

▶일시 : 2008년 12월 23일(화) 07:30

▶장소 : 서울가든호텔 2층 무궁화홀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토론회

▶주제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일시 : 2008년 12월 26일(금)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이 주의 칼럼

## 기다리는 MB, 기다리지 않는 북미

이대근(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

남북대화는 일찌감치 끊겼다. 남북관계는 왜 갑작스레 1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일까?

남북관계는 상호작용의 체계이다. 북한의 행동은 남한의 행동을 반영한다. 이런 남북관계의 성격을 염두에 두면서 남한이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자.

우선 대북정책의 방향을 보자. 모호하다. 상생과 공영의 비전을 추구한다면서 포용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분명치 않다. 이에 비해 구체적인 대북조치들의 성격은 분명하다.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는 이런 이명박 정부의 행동에 대한 반작용이다.

혹자는 북한은 이미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 이는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이 대선정국 때, 인수위원회 활동 때 어떤 대북신호를 보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으레 남북간 경색국면이 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이전 정부의 대립상태가 이월된 것이지 새 정부가 새로 조성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전혀 없이 진전된 남북관계를 물려받으면서도 기록적으로 짧은 기간에 남북관계를 훼손했다.

‘기다리기’. 그것은 사실 이명박 정부 최고의 대북정책이다. 인도주의 사업이라면 쌀을 줘서 굶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굶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더 심

각한 남북대결의 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걸 두고 북한의 도발을 기다리는 정책이라면 지나친 누명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기 노선’이 지닌 치명적 결함을 발견할 수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비판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계적으로 남북관계 차단을 확대하고 압박해 들어갈 것이다. 남한내 대북정책 전환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그럴수록 북한 개입의 효과는 커질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어떨까? 기다려줄까? 대북정책 재검토가 끝나면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공조를 통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조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그리할지 알 수 없고, 그런다 해도 ‘기다리는 미국’을 의식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압력이 될 것이다.

기다리기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해도, 이명박 정부가 그 끝을 낙관하며 나름의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도 저도 되는 일이 없으니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어, 마지못해 끌려가는 게 기다리기의 본질이다.

기다리기를 선택했다면 좋다. 그러나 전략적 후퇴가 있듯이 기다리기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산하에 좌우를 막론한 대북정책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보라. 그게 싫으면 합리적 보수인사들로 구성해도 좋다. 그래도 결론은 예견 가능하다. 그 권고를 받아들여라. (이 글의 원문은 [http://wee.kly.changbi.com/blog\\_post\\_333.aspx](http://wee.kly.changbi.com/blog_post_333.aspx)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성공단, 내달부터 생산업체 우선 출입

-- 12월 15일 노컷뉴스

통일부는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차단조치로 개성공단 출입경에 불편이 커짐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성공단 생산업체에 우선순위를 두고 출입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조치 이후 개성공단 출입 시간을 선착순으로 정해왔지만 특정 시간대에 출입 수요가 몰리면서 기업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어 생산업체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출입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에는 사업자나 서비스단체, 건설업체 등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 9시에 들어가고 오후 3시에 나오려고 해 많이 붐빈다”며 “내년부터는 출입신청을 하면 우선순위를 가급적이면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북한, 오늘부터 3G 휴대전화 서비스 시작

-- 12월 15일 노컷뉴스

북한지역에서도 15일부터 본격적인 이동통신(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집트 통신사인 ‘오라스콤 텔레콤’(Orascom Telecom)이 15일부터 북한에서 3G 휴대전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전했다. 오라스콤 텔레콤의 라샤 모하메드 대변인은 “15일부터 북한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추가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에 투자한 첫 외국계 통신사인 오라스콤은 지난 1월 31일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권을 획득한 이후 설비 투자를 해왔으며, 지난 5월에는 시험통화에 성공했다.

오라스콤 텔레콤은 앞으로 3년 동안 북한에 4억 달러를 투자해 평양을 비롯한 3대 주요 도시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휴대전화 가입자당 연평균 12~15달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휴대전화 미개척 시장인 북한 진출에 대한 오라스콤 텔레콤의 전망으로 지난주 카이로 증권 시장에서 오라스콤의 주가는 9.8% 폭등했다.

이보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당국은 최근 평양에서 가입 희망자들에게 기기당 700달러에 판매하기로 했으며 1차로 평양시에서 통신망을 개통한 후 차츰 지방의 도·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의 소리 방송도 오라스콤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휴대폰 개통 초기엔 평양에서 15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5일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3년간 개성공단 경제효과 투자대비 3~4배”

-- 12월 15일 연합뉴스

지난 2005~07년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는 투자 대비 3~4배에 달한다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15일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강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우리마당 통일문화연구소’ 주최 토론회 발표문에서 지난해까지 개성공단에 투입된 자금은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정부 자금 1천510억원, 한국토지공사사의 부지조성 등을 위한 자금 1천131억원, 입주기업 투자금 1천933억원 등 모두 4천574억원이라고 합산했다.

양 교수는 또 2005~07년 개성공단의 생산 유발효과는 11억2천만~14억3천만 달러,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억6천만~4억6천만 달러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3년간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더한 개성공단의 경제효과(14억8천만~18억9천만 달러)는 환율을 1달러당 1천원으로 할 경우 투자금(약 4억6천만 달러)의 3~4배에 이른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최대 성과는 명실상부한 남북 상생의 경험모델 창출에 성공했다는 점”이라며 개성공단은 경제효과 외에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북한 주민의 대남인식 개선 등의 정치사회적 효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남북경협은 아울러 “극심한 물자난, 외화난에 시달리는 북한 경제에 숨통을 틔워 북한 사회의 안정에 기여”했다고 양 교수는 주장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상임대표인 김승교 변호사는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법률문화의 변화”라는 발표문에서 남북간 “교류협력 법제와 국가보안법의 이질성, 상충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가보안법은 남북간 화해협력, 공존공영의 길과 모순, 충돌한다며 이 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 북한 초청 추진

-- 12월 15일 뉴시스

2011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IFOAM OWC)에 북한을 초청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앙드레 류 세계유기농운동연맹(IFOAM) 부회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유기농대회에 북한을 참여시키면 세계정세는 물론 북한의 경제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농 발전사례를 아프리카 등 빈곤국가와 공유하면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유기농대회 참가는 극빈국 중

하나인 북한의 농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경제소식] “올해 100여종 의약품 새로 개발”

-- 12월 15일 연합뉴스

북한이 올해 100여종의 새로운 의약품을 연구 개발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14일 주장했다.

방송은 “조선고려의학과학원은 질 좋은 각종 약초로 고려약 엑스(엑기스)제를 제조했고 심장병 치료에 효과가 큰 단산엑스를 비롯한 각종 고려약을 개발하고 그 치료 효율을 높였다”고 전했다.

조선고려약기술센터 연구사들은 항균 작용과 혈압 강하, 해열 작용 등이 강한 ‘단노산강장 알약’, ‘황경피대황염증 알약’을 비롯해 질 좋고 먹기 편리한 고려약들을 피막화해서 내놓았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평양시제1인민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들도 여러 의약품을 개발해 치료사업에 이용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남북협력기금 18년간 총 8조2천억원 집행>

-- 12월 10일 조선일보

대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종자돈인 남북협력기금이 1991년 설치 후 18년간 약 8조2천억원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가 15일 펴낸 ‘2008 남북협력기금 백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정부는 총 9조3천225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 이 중 8조2천267억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다자간 북핵 협상 틀에서 합의된 대북 경수로 제공에 투입된 4조3천405억원과 기금관리비, 대출금 회수분 등을 제외하고 ‘순수 사업비’로 쓰인 액수는 3조8천483억원에 달한다.

또 순수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2000년 이후 연도별 사용계획 대비 집행 실적은 2000년(81%), 2003년(92.5%), 2005년(82.9%), 2007년(82.2%) 등 80% 이상이었지만 북한이 핵위기를 고조시키면서 대북 쌀차관 지원이 일시 중단됐던 2006년은 37%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는 당초 책정된 1조1천45억원의 순수 사업비 중 11월말 기준으로 약 18%인 2천4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995년부터 지난 9월말까지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해 집행된 남북협력기금은 총 2조2천679억원이며, 이 중 당국 차원의 지원에 1조9천839억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에 906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에 1천934억원이 각각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남북협력기금의 조달경로는 정부 출연금이 47.2%, 공공지금 관리기금 예수금 47.7%,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자체 수입이 5.1%라고 백서는 밝혔다.

백서는 “남북협력기금은 사실상 별도 수입원 없이 국가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다른 기금에 비해 계획대비 집행실적도 저조하다”며 “중장기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기금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경수로 사업비와 관련, “국채를 발행해 사업재원을 조성함에 따라 이자 부담 등이 추가로 야기됐으며 현재까지도 국채상환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수로 사업이 종료되고 사업비 채무를 한국과 일본이 인수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출금 1조3천744억원이 불가피하게 우리 정부 부담으로 전환됐다”고 부연했다.

미국 “WFP 통한 대북 식량지원 계속한다”

-- 12월 16일 노컷뉴스

미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던 것을 중단했다는 최근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미국은 북한과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무부의 관리는 15일 “미국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난 5월 북한과 체결한 합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밝혔다.

국무부 관리는 “미국 정부가 모두 5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긴급히 지원하기로 북한 정부와 합의한 뒤,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14만 3천 톤의 식량을 세계식량계획과 미국의 비정부 구호단체를 통해 지원했고, 이달 말까지 2만 1천 톤의 옥수수를 실은 6차분을 북한에 도착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무부 관리는 그러나,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가 세계식량계획 요원에게 속히 비자를 내주고 합의한 대로 세계식량계획이나 비정부 구호단체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감시요원의 수를 제한하지 말 것 등을 포함한 여러 도전 과제를 놓고 북한 측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현재 감시체제와 관련해 견해차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세계식량계획 아시아 사무국 폴 리슬리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미국이 북한에 보낸 식량 5차분은 전량 미국의 비정부 구호단체들에 보내졌다”면서, “미국이 하루 속히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식량을 분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미국무부 “對北 중유지원 중단 러시아와도 합의된 사항”

-- 12월 16일 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15일 북한이 핵검증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앞으로 중유지원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 대북 중유지원 중단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합의된 사항이라며 러시아의 합의설 부인을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다.

로버트 우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문제(중유지원)에 대해 다른 4개국 대표들과 논의했으며 검증의정서 합의가 없으면 미래의 에너지 선적을 진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그 조건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도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북한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유지원 중단은 공식적으로 문서로 합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검증의정서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연료 선적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는 이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우즈 부대변인은 또 “북한이 나머지 참가국이 모두 동의한 핵검증 의정서에 동의하지 않아 6자회담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난국이 타개되기 전까지는 선적 문제에서 앞으로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핵검증의정서 합의와 중유지원을 연계해 추진할 것이며 이것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EU “고려항공 안전기준 부족” …유럽 취항금지

-- 12월 16일 노컷뉴스

북한의 고려항공은 최근 기존의 낡은 여객기를 새 여객기로 교체했으나 유럽연합(EU)은 여전히 국제적 수준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유럽 취항을 금지했다.

유럽연합 위원회의 파비오 피로타 교통에너지부 공보관은 “고려항공이 최근 기존의 여객기를 새 여객기로 교체했다고 하더라도 유럽연합이 기준으로 하는 기본적인 안전성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연합 내 취항을 금지하는 명단에 남게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말했다.

북한 당국은 올해 초 유럽연합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려항공은 안전성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올바른 운항 계획을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유럽연합이 평가한 결과, 이같은 북한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유럽연합 관계자는 전했다.

유럽연합 내의 취항을 금지하는 항공사 명단은 유럽 지역 공항에서 점검을 받던 도중에 발견된 여객기의 결

함과 관리 상태, 그리고 해당 국가와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되고 적어도 석 달에 한번씩 재평가를 통해 갱신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고려항공은 지난해 말 러시아가 생산한 항공기(Tupolev-204)를 새로 구입한 데 이어 올해 초 한 대를 도입해 현재 북경과 평양 간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북한은 앞으로 러시아로부터 새로운 기종의 항공기(Ilyushin Il-96, Sukhoi Super jet 100)를 더 구입해 오래된 여객기 교체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 北, 정보화시대 외면 못하고 이동통신 재개

-- 12월 16일 중앙일보

북한이 중동지역 최대 이동통신사인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의 투자를 끌어들이 15일 ‘제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 것은 무엇보다 북한도 정보기술(IT) 시대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성을 절감한 때문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언론은 최근 정보기술 시대의 도래와 그에 대한 적응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북한의 조선체신회사 박명철 사장도 이날 개통식에서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통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이동통신 서비스가 북한과 오라스콤간 계약대로 계속 발전한다면 북한의 경제·사회 발전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중요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또 대규모 외국인 투자의 안정적인 성공 모델로 국제사회에 알려져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커다란 홍보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오라스콤이 이 사업에 3년간 투자키로 한 4억달러는 현재까지 개성공단 투자액에 버금간다.

남북관계의 경색 속에 개성공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오라스콤의 북한내 이동통신 사업은 대북 투자의 불안한 이미지를 상쇄하고 남북경협과 관련 대남 압박 효과도 부수적으로 북한에 안겨줄 수 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북한 당국 정책의 불안정성이다.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이라는 2개의 목표가 상충할 때는 늘 체제유지를 우선해 왔다.

이동통신은 북한 경제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내부 정보의 유출과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체제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실제로 태국의 록슬리 그룹과 공동으로 동아시아전화통신회사(NEAT&T)를 설립해 2002년 11월 평양시와 라선시에 휴대전화를 처음 보급한 뒤 각 도 소재지는 물론 군지역에서도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가 2004년 6월 갑자기 정책을 바꿔 휴대폰 사용을 전면금지했다.

## “北, 나진.선봉서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

-- 12월 16일 연합뉴스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지난 10월 나진선봉 경제특구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정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이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진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철수하라고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실제 투자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정리를 위해 외국기업들에 대한 자료 등을 조사한 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 北신문 “日, 에너지 지원 제3국 전가는 무책임”

-- 12월 16일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일본이 북핵 10.3 합의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에너지 지원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 제3국에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제 처지도 모르는 자들의 횡방질’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10.3합의서에는 일본도 포함한 5자가 에너지 제공 등 경제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명문화돼 있고 다른 나라들은 이 문서에서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유독 일본만 합의서에 배치되게 자기의 의무 이행을 지독하게 거부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일본이 호주 등의 대남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다른 나라에 6자회담 유관국의 의무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고약한 횡방꾼은 회담 참가 자격을 잃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북핵·남북관계 담보로 대북물자 ‘겨울잠’

-- 12월 16일 연합뉴스

북핵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담보 속에 북한에 주려고 구매했던 각종 자재·장비의 발이 묶이면서 정부에 보관료 문제 등의 고민을 안기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대가로 제공키로 한 철강재(자동용접강관) 3천톤은 10월말 생산이 완료됐음에도 50여일이 지난 16일 현재 창고에 보관되고 있다. 철강재지원 계획은 북한이 9월 하순부터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지연을 이유로 ‘불능화’를 중단한데 이어 ‘역행 조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일단 철강재 생산 완료시(10월말)까지 북핵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지만 생산 완료 전 미국이 대북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10.11)하고, 그에 따라 북한이 불능화를 재개했음에도 그 즉시 철강재 제공에 나서지 않았다.

북미간 핵검증 관련 합의가 6자회담 틀에서 최종 추진되는지를 지켜본 뒤 제공하자는 ‘신중론’이 정부 안에서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달 8~11일 열린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참가국들이 검증 의정서 채택에 실패, 북핵 기상도가 악화되면서 정부로서는 제공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게 됐다.

이런 와중에 11월11일로부터 부과된 하루 50만원의 철강재 보관비용은 이날 현재 1천800만원으로 불어났다.

또 정부가 북한에 공급하려던 광케이블 등 수억원대의 통신 관련 자재·장비도 창고에 장기 보관 중이다.

정부는 지난 5월께 남북간 육로 통행 관리에 필요한 통신 자재·장비를 북한에 공급하기로 하고 일부 조달까지 마쳤다. 하지만 정부는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국민 정서를 감안해 제공을 유보했고, 이제는 주겠다고 해도 북한이 받지 않는 상황이 됐다.

북한에게서 10월27일 자재·장비를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제공시기를 저울질하던 정부는 북한의 육로 통행 제한차단 예고가 있는 다음 날인 11월13일 관련 논의를 제안했지만 이번엔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인력난 개성공단 고사 위기

-- 12월 16일 헤럴드경제

개성공단 남측 인력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한 ‘12·1 조치’ 이후 2주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고사(枯死)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남측 체류 인력의 감소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바이어들의 생산 주문이 30%나 취소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 아파트형 공장 입주계약을 취소하려는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출입이 제한 조치가 지속되면서 개성공단이 점차 녹슬어가는 모습이다.

신발 부품을 생산하는 A업체는 턱없이 부족한 현지 인력에 속이 타들어간다. 이미 90억원을 투입해 공장을 세웠지만, 현지 인력이 부족해 생산 라인이 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업체가 생산라인을 완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은 1700명. 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인력은 90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당장 공장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한 점도 더욱 상황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12·1 조치로 현지 체류 인력이 1명으로 줄어들면서 공장 가동은 물론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남측 인력은 1주일 단위로 출입증을 발급받아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개성공단 출입국 사무소는 매주 금요일 개성공단을 빠져나오는 남측 인력들로 명목현상을 빚고 있다.



## 현대아산 사업조직 ‘슬림화’

-- 12월 16일 연합뉴스

금강산·개성 관광 중단으로 경영 위기를 맞은 현대아산이 사업 조직 정비에 나섰다. 현대아산은 16일 사업개발실과 계약지원실을 유관 본부에 통폐합, 기존 ‘2실·4본부·2사업소’를 ‘4본부 2사업소’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권영주 상무가 사업개발실과 합쳐진 건설사업본부장을 맡고, 관광사업본부장과 개성사업소 총소장에는 조철중 상무와 김영현 상무가 각각 임명됐다.

현대아산은 이 같은 ‘군살 빼기’ 뿐 아니라 특구개발부·해외영업팀 등을 신설, 신규 사업 개발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는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아산은 지난 7월 11일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가동한 비상경영체제를 내년 3월까지 연장기로 결정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조직 개편은 위기 극복에 적합하도록 최대한 조직을 가볍게 ‘슬림화’하고, 분산된 업무를 집중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10월 이후 7개사 개성공단 입주계약 취소”

-- 12월 17일 연합뉴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하려고 했던 기업의 입주계약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이후 개성공단에서 5개 필지에 7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취소했다. 이들 기업은 작년 6월 단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설계하거나 건립중이었으며, 계약 취소에 따라 1천700만~7천만원의 계약금을 포기했다.

7개 기업 중 2개 기업은 각각 화재 피해와 키코 손실로 인해 계약을 취소했지만 나머지 기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가 계약 취소의 적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천 의원측은 설명했다.

또 작년에도 7건의 계약 취소 사례가 있었지만 기업들이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올해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천 의원측은 밝혔다.

## 김정일, 자강도 전자업무연구소 등 시찰

-- 12월 17일 노컷뉴스

김정일 위원장이 자강도 강계시의 전자업무연구소와 자강도 도서관, 강계고려약공장 등을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먼저 자강도 전자업무연구소를 방문해 프로그램 개발자료전시장 등을 돌아보고 여러 학교들의 전자계산기 수재반을 졸업한 젊은 기술자들이 벌써 정보산업부문의 중진으로 자라난데 대해 기뻐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보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보산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대렬을 늘이고 그들의 수준을 급속히 높여 정보기술 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자강도 도서관을 방문해 새로 가꾼 목록검색실과, 전자계산기 강의실, 전자열람실 등을 둘러보고 “전자계산기망에 의한 열람은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군, 리에까지 전자계산기망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강계고려약공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널리 써온 고려약을 발전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찰에는 노동당 자강도위원회 박도춘책임비서와 노동당 중앙위원회 장성택부장, 주규창 제1부부장, 북한군 현철해, 리명수대장이 동행했다. 강계시 시찰은 지난 11일 황해북도 사리원 닭공장과 미곡협동농장, 사리원 시내의 민속거리를 시찰한지 5일 만이며, 김 위원장은 지난 1월과 7월에도 강계시를 시찰했다.

## 미국, 대북 의료지원도 계획대로 진행키로

-- 12월 17일 노컷뉴스

미국정부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식량지원과 함께 대북 의료지원도 계획 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 산하의 국제개발처(USAID)가 미국 내 4개 민간 단체인 머시 코(Mercy Corps)와 사마리탄스 퍼스(Samaritan's Purse), 글로벌 리소스 (GRS), 유진벨 재단 등에 각각 100만 달러씩 모두 400만 달러를 지원해 북한의 의료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머시코의 조이 포텔라 공보국장은 “국제개발처의 지원을 받아 지난 9월부터 황해남도 3개 병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현재 2단계인 의료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머시코의 포텔라 공보국장은 또 “미국 국무부는 6자 회담의 결렬이나 경제적 위기와 같은 외부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의료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잘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머시 코어 외의 다른 단체들도 각자 맡은 지역에서 전력 시설을 보충하고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단체는 사업에 쓰인 비용을 국제개발처에 청구해 지원을 받고 있다.

WFP “내년 대북 식량 지원금 3억 4천 달러 필요”

-- 12월 17일 노컷뉴스

세계식량계획(WFP)이 내년에 77개국 약 1억명의 취약 계층에 식량을 지원을 위해 52억달러가 필요하며, 북한에는 3억 4천600만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계획은 전 세계 77개 국가의 약 1억 명을 대상으로 2009년도 한해 동안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화로 약 52억 달러가 필요하다면서 국제 사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도 북한에는 취약 계층의 주민 약 560만 명을 도울 수 있는 식량 원조금 3억 4백 60억 달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세계식량계획은 식량과 비료,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지원 재원이 바닥났으나 국제적인 경제 위기 때문에 식량원조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증가해 식량상황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 제네바 사무소의 에밀리아 카셀라 공보관은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북한은 올해 9월부터 새로운 긴급 식량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 필요한 예산의 약 3.5%만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北 군부 2차 개성 실태조사에 ‘촉각’

-- 12월 17일 연합뉴스

김영철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중장)이 이끄는 북한 군부 인사 5명이 17일 개성공단을 방문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실장 일행은 전날 오후 방문을 예고한 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인장,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잇달아 가는데 이어 18일까지 입주기업 및 유관 업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일단 김 실장이 밝힌 방문 목적은 ▲12.1조치의 취지 설명 ▲12.1 조치 이행상황 점검 ▲개성공단 현황 파악 등이라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그러나 당국은 예단을 배제한 채 김 실장 일행의 궁극적인 방문 목적이 말 그대로 상황 점검 차원인지, 아니면 ‘12.1 조치’에 이은 추가적인 대남 조치를 취하기에 앞선 예고 차원인지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12.1 조치를 시행하면서 1차적인 조치라고 한 만큼 후속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1차 조치를 시행한지 한달도 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남측의 대응이나 발언이 딱히 없었던 만큼 급히 압박의 단계를 높일 이유는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실태 파악의 주체가 개성공단 담당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아니라 군부라는 점이 심상치 않다.

김 실장 일행은 앞서 북이 육로 통행 제한 차단 등을 담은 12.1 조치를 예고하기 6일 전인 지난 달 6일 유사한 형태로 개성공단을 방문, 기업들을 둘러보며 ‘철수에 얼마나 걸리느냐’는 등 압박성 발언을 한 바 있다.

北, 세계 금융위기에 ‘민족경제 자립성’ 강조

-- 12월 17일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미국에서 비롯된 세계 금융위기에 대해 “미국 달러(달러)에 의한 일국 금융지배체계가 무너져 가고 있으며 금융 다극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성’ 강화의 중요성과 외자 도입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세계 금융위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세계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국제적 자구책 마련 등을 소개하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변질되고 있는 현 사태가 주는 교훈은 우선 서방 열강들이 다른 나라, 민족들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침략적인 대외정책을 당장 견어치워야 하며 특정한 나라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하지 말고 다무적인 화폐제도를 세우고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화’에 말려들어 민족경제가 말살되는 현상을 막아야 하며 올바른 경제이론과 과학기술에 의거한 경제발전을 추동하지 않고 생존경쟁에 의거한 무질서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면 언제 또 충격적인 경제위기를 겪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외자를 마구 받아들이다가는 민족경제를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드비전, 평양서 남북농업협력 토론회 개최

-- 12월 17일 연합뉴스

북한에서 씨감자 생산, 국수공장 건립, 채소온실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해온 월드비전이 18, 19일 이틀간 평양에서 남북 농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농업과 학술포지엄을 열어 남북간 농업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심포지엄엔 남측에서 박호근 월드비전 농업연구소장, 박권우 고려대 교수, 윤태명 경북대학교 교수, 권태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북측에선 농업성과 농업과학원 연구원들이 각각 참석한다.

박종삼 회장을 포함해 41명으로 이뤄진 월드비전 대표단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중국 선양에서 북한의 고려항공을 이용해 방북한다.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은 1994년 이래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돕기 위한 각종 개발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埃투자 北이동통신 이름 ‘고려링크’

-- 12월 17일 연합뉴스

이집트 이동통신 회사의 대규모 투자로 북한에서 시작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이름은 ‘고려 링크 (Koryo Link)’라고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고려링크의 마크는 천리마의 이미지라며 “천리마 속도로 더 높이 더 빨리 정보통신 부분의 현대화를 위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집트 오라스코 텔레콤과 북한의 조선체신회사가 이 이동통신 사업을 위해 만든 합작회사의 이름은 ‘체오’. 체오는 현재 12만6천명의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앞으로 국내수요에 맞게 능력을 제고하여 봉사 영역도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이동통신 개통식에서 오라스코 텔레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은 “조선의 모든 인민들에게 ‘고려 링크’의 이동통신 봉사가 가닿을 때까지 협조를 계속해 나갈 의향과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정보통신 수요의 잠재력을 언급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사위리스 회장은 또 이 사업이 “중요한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언급했다고 신문은 전함으로써 북한과 오라스코간 이동통신 공동사업 계획이 장기적임을 시사했다.

이집트 오라스코, 北 이통건설·은행 진출

-- 12월 17일 연합뉴스

북한 무역은행과 이집트 오라스코 텔레콤이 합작으로 운영하는 오라은행이 16일 평양에서 문을 열었다.

오라스코는 이미 북한내 이동통신 사업과 류경호텔 건설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다.

개업식에서 북한의 오광철 무역은행 총재는 “무역은행과 이집트 오라스코 전기통신회사 사이의 협력에 의해 오라은행이 개업했다”며 “은행이 앞으로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을 강화하고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라스코 텔레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은 “은행이 이집트 인민과 조선 인민 사이의 이해와 친선관계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개업식에는 에젤딘 헤이칼 오라은행 총재와 리영수 부총재가 참석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해, 합작은행의 총재는 오라스코측에서, 부총재는 북측에서 맡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신봉렬 재정성 부상, 김천균 중앙은행 이사, 이스마일 후세인 북한 주재 이집트 대사 등도 개업식에 참석했다. 당초 오라스코가 투자했다가 프랑스 라파즈사에

지분을 넘긴 상원세멘트공장에선 2010년을 완공 목표로 설비갱신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 올 곡물 총 생산 추정량 431만” <농진청>

-- 12월 18일 연합뉴스

올해 북한의 곡물 총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30만 정도 증가한 431만으로 추정됐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북한의 기상과 병해충 발생 현황, 비료 등 농자재 공급사정을 종합 분석한 결과 북한 곡물 총 생산량은 지난해 401만에 비해 7.5% 정도 증가한 431만으로 추정된다고 18일 밝혔다.

벼는 비료와 생육 초기 물 부족이 있었지만 생육 후기 일조량이 풍부하고 태풍 등 기상재해가 적어 지난해에 비해 33만 정도 쌀 수확량이 늘어 186만t을 수확했으며 옥수수는 생육초기 가뭄으로 지난해보다 5만t이 준 154만t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 두(豆)류 16만, 감자 등 서(薯)류 51만, 보리와 잡곡 등 맥(麥)류 24만t이 생산된 것으로 농진청은 추정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올 북한 기상은 작물 생육기간인 4-9월의 평균기온이 18.0℃로 평년의 17.8℃와 비슷했고 강수량 역시 739.7mm로 평년의 742.7mm와 비슷했다”며 “무엇보다 생육 후기인 8-9월의 일조량이 지난해에 비해 16%나 증가했고 태풍의 피해가 없어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北 “남북관계 중대기로…근본문제부터 풀어야”

-- 12월 18일 연합뉴스

김영철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 국장(중장)은 18일 이틀간의 개성공단 실태조사를 마치면서 “현재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을 둘러본 뒤 문무홍 공단 관리위원장과 입주업체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이 전했다.

김 국장이 언급한 ‘근본적인 문제’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존중 및 이행에 바탕한 큰 틀에서의 남북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김 국장은 또 전날부터 이틀간에 걸친 기업인들과의 면담과 업체 방문때 우리 정부에 공단을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근로자 숙소 건립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비중있게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김 국장이 남북간에 합의한 사항인 기숙사 건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남북은 참여정부 시절인 작년 12월 1만5천명 수용 규모의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건설에 합의했지만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숙소 관련 논의는 현재까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숙소 건립 비용 230억원을 반영해 뒀지만 사업을 추진하려면 핵시설 불능화의 원만한 마무리 등 북핵 상황의 진전이 있어야 하고 세부 사항 협의를 위한 당국간 대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평양 상점들에 휴대폰 가입 광고물

-- 12월 21일 연합뉴스

새해를 앞두고 방문한 북한 평양 시내 곳곳의 상점 유리 창문에는 휴대폰 가입을 홍보하는 ‘3세대 이동통신’이라는 글귀와 휴대폰화 사진이 담긴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지난 15일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 텔레콤이 북한에서 개통한 휴대폰화 서비스인 ‘고려링크’의 가입자 확보를 위한 홍보물이다.

남북 농업과학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월드비전 관계자 등과 함께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머물면서 평양 시민이 거리에서 휴대폰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보통강 호텔 등에서 휴대폰화를 사용하는 중국인 등의 모습은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었다.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측 관계자는 “아직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입자가 많지 않을 것”이지만 “필요하다면 휴대폰화를 가지고 다녀야 하지 않겠느냐”고 구입의사를 내비쳤다.

2009년을 앞둔 평양은 이미 진부한 말이지만 변화하고 있었다.

#### “北, 국군 포로·납북자 송환 용의 표명”

-- 12월 22일 연합뉴스

북한은 냉랭해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의 하나로 6.25전쟁이후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 중 일부를 송환할 의향이 있음을 한국측에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과 가진 비밀 접촉에서 이같은 뜻을 전하면서 대신 남북 경협을 신속한 재개를 희망했다고 대북 소식통들이 22일 전했다.

이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중 일부를 판문점을 통해 남측에 보내거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송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이러한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그 진정한 의도와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나의 방안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말한 바 있다.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의 탈북 이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76명과 가족 159명이 귀환했다. 올해 고국의 품에 안긴 국군포로와 가족은 각각 6명과 7명이다.

국방부는 현재 560여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귀환 국군포로부터 이들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남북 경협을 우선 사업으로 ▲무산 철광석 부근에 제철소 건설 ▲나진·선봉지역에 석유화학 단지 건설 ▲식료품 공장 건설 ▲평양 주택 10만호 건설 ▲평양·신의주 고속도로 건설 등을 내세우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 北 겨울 민박온천 ‘인기몰이’

-- 12월 22일 연합뉴스

올 겨울 들어 남북한 모두에서 온천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남한에서는 경기침체 여파로 겨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대신 온천시설을 갖춘 국내 워터파크를 찾는다면, 북한에서는 지난 1년간 민박온천을 비롯한 온천시설이 대거 증가했기 때문이다.

22일 북한 언론보도를 종합한데 따르면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존의 온천 요양 및 휴양 시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한편 온천이 많은 지역들에 별도의 손님방을 갖춘 민박 형태의 살림집을 많이 건설해 “전국적으로 온천요양생 수용능력이 거의 2배”로 늘어났다.

조선중앙통신(12.12)은 “함경북도 경성온천, 평안남도 강서·석왕사 약수를 비롯해 온천과 약수 원천이 풍부한 지역에 (민박) 요양마을이 늘어났다”며 “지난해부터 온천, 약수가 나오는 곳마다 요양소들을 개진(개선)하거나 새로 꾸리는 것과 함께 치료용 문화주택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고 전했다.

조선중앙방송(12.11)도 최근 “온천요양 마을들의 집집마다 온천욕이 한창”이라며 몇몇 지역에 “농촌문화주택 형식의 요양마을들이 새로 일떠선 후 전국적으로 1만 수천명의 주민이 온돌방에서 숙식을 하며 광천 의료봉사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온천 요양마을이 새로 들어선 대표적인 곳은 황해남도 삼천군 달천온천지구, 평안북도 동신군 원흥온천지구와 운산군 운산온천지구, 강원도 판교군 갈산온천지구, 함경북도 명천군 황진온천지구 등이다.

Orascom Telecom of Egypt Opens Bank in North Korea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이 북한에 은행을 열다

-- 12월 16일 Bloomberg

출처: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20601087&sid=ayACO0S5c80g&refer=home>

Orascom Telecom Holding SAE opened a bank in North Korea, one day after becoming the first mobile-phone company to invest in the Stalinist state.

Orascom Telecom, the Middle East's biggest wireless company, opened Ora Bank in Pyongyang in the presence of Chairman and Chief Executive Officer Naguib Sawiris, a company official said on condition of anonymity. Ezzeldine Heikal, who is also head of Koryolink, Orascom's North Korean mobile-phone network, was appointed president of the bank, the official said without providing further details.

Orascom Telecom is trying to make up for a slowdown in Pakistan and Bangladesh by investing in one of the world's most isolated countries. Orascom joins OAO Russian Railways and Emerson Pacific Group among a handful of companies in exclusive North Korea, where the economy has been ravaged by famine and U.S. sanctions over its nuclear program.

.....

오라스콤이 북한에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하루 후 오라스콤 텔레콤 홀딩스 SAE가 북한에 은행을 개설하였다. 중동 최대의 휴대전화 서비스 회사인 오라스콤은 Naguib Sawiris 회장 겸 CEO가 참석하여 평양에 오라은행을 개설하였다고 익명의 임원이 밝혔다.

오라스콤의 북한 내 휴대전화 서비스 회사인 고려링크의 대표인 Ezzeldine Heikal이 은행의 행장으로 지명되었다고 전했다. ... 오라은행은 오라스콤과 북한 국영 무역기업 간의 합영기업이라고 북한의 국영 통신사에서 전했다 ... 오라은행은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자들의 사용료 지불과 해외 북한노동자들의 송금 등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

INTERVIEW-Aid loss to hurt North Korean economy - expert

인터뷰 - 원조 중단이 북한 경제에 해가 되다

-- 12월 19일 Reuters

출처: <http://uk.reuters.com/article/asiaCrisis/idUKSEO270644>

North Korea's broken economy faces further hardship after foreign powers called for a halt in aid to punish Pyongyang for not living up to a disarmament deal, a defector who specialises in the North's economy said on Friday.

Last week, the United States said the energy-starved North would see a suspension of shipments in heavy fuel oil because it would not agree to a system to check claims it made about its nuclear programme as called for in the disarmament-for-aid deal.

"This creates a vicious circle," Cho Myung-chul, with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told Reuters in an interview.

"The cut in aid means less money to use in other sectors and less industrial production, which inevitably means a further deterioration in the lives of people who already have little."

North Korea stands to lose out on about half of the 1 million tonnes in heavy fuel oil that has yet to be shipped to it as a part of the deal it reached with five regional powers.

.....

북핵 해결을 위한 협상에서 북한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로 대북 원조가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북한 경제가 더욱 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난 금요일 북한 경제 전문가가 전했다. 지난 주 미국은 북핵 검증 시스템에 북한이 동의하지 않는 한 북한에 중유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악순환을 의미한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명철은 인터뷰에서 언급하였다. 그는 대북 원조의 중단은 다른 영역에서 활용될 자금과 산업 생산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이미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악화됨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

北の動向に注目 21年 公安庁、回顧・展望

북의 동향에 주목, 평성 21년 공안청

-- 12월 20일 산케이신문

출처 : <http://headlines.yahoo.co.jp/hl?a=20081220-00000048-san-int>

公安調査庁は19日、国内外の公安情勢をまとめた平成21年版「内外情勢の回顧と展望」を公表した。北朝鮮の核問題では、無能力化作業の中断などにより米朝協議を実施し、テロ支援国家指定解除を引き出した状況にふれ、「さらなる実利獲得を目指すと考えられ、再び『瀬戸際戦術』を駆使する可能性」を指摘した。

拉致問題調査でも、指定解除を契機に対日非難を活発化させたことから「拉致問題への対応をカードに硬軟両様の揺さぶりを展開する」と警戒する。一方、金正日総書記の「健康異変」で、「後継体制構築に向けた動きや、幹部間の対立」に注目している。.....

공안 조사청은 19일, 국내외 공안 정세를 정리한 평성 21년판 「내외 정세의 회고와 전망」을 공표했다. 북한의 핵문제는 불능화 작업 중단 등으로 미-북 협의를 이루어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받아낸 상황에서 「새로운 실리 획득을 목표로 다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납치 문제 조사에 대해서도 지정 해제를 계기로 대일 비난을 활발히 하면서 「납치 문제의 대응 카드로 강은 두 가지의 방안을 전개한다」며 경계를 촉구했다. 한편, 김정일 총서기의 「건강 이변」과 관련 「후계 체제 구축 움직임이나 간부 간 대립」에 주목하고 있다. ....

## 추천 논문

## 동북아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우리의 과제

원동욱 박사(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

한국은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극동에 위치하여 태평양에서 유럽까지 연결하는 대륙교(Landbridge)의 관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오랜 기간 남북분단 상황으로 인해 ‘가상의 프로젝트’에 머물러 있을 뿐 한국은 여전히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통한 국제복합운송을 수행해 왔을 뿐이다.

한국의 경우 동북아 국제복합운송체계는 TKR의 복원을 통해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남북간 TKR의 물리적 복원이 이미 끝난 현 시점에서 북핵문제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TKR 전 구간에 대한 실질적 운행은 물론이고, 이를 통한 TCR 및 TSR과의 연계는 여전히 요원한 일이다.

향후 동북아지역에 기회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시장 여건이 형성될 것을 고려하여, 한국이 교통물류허브로서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과 동시에 교통물류허브의 배후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한·중·일 및 ASEAN 국가들과의 교통물류협력의 추진을 통해 배후시장을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아가 대륙철도의 연결 및 다양한 국제복합운송의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배후시장을 극동러시아,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는 전략 수립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최근 남북관계의 조정국면에 따른 경색으로 인해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6자회담의 틀을 통한 북핵 폐기 프로세스의 순조로운 이행과 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른 남북관계의 새로운 조정을 통해 북한을 새로운 배후시장으로 개발하는 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는 관건은 역내 교통물류협력의 순리적인 전개에 있으며, 따라서 무엇보다 효율적 협력기제로서 동북아 교통물류레짐의 구축을 통한 제도적 보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교통물류레짐의 구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첫째, 동북아 교통물류레짐의 근본 동력은 역내 경제통합의 부단한 진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역내 교역과 투자의 증가를 통해서만이 교통물류체계의 역내 통합이 가능하며, 역으로 교통물류체계의 통합을 통해서만이 역내 교역과 투자의 활성화 또한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통물류레짐과 경제통합은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할 수 있다.

둘째, 교통물류레짐의 구축과정은 국가간에 일반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교통물류 인프라의 ‘개별구축, 공동이용’ 방식에서 ‘공동구축, 개별소유’, 그리고 ‘공동구축, 공동소유’의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동북아 각국의 교통물류 영역에서의 협력이 일정한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교통물류정책의 통합이라는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갈 수 있다.

최근 동북아에서 역내국가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동북아공동체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구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특히 역내 교역의 활성화와 상호의존도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역내 FTA 추진을 비롯한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이 부각되고 있다. 동북아 역내국가간 생산요소의 상호보완성이 크고 역내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점에서 호혜적인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협력의 경험이 일천하고 지역적 정체성(identity)이 취약한 동북아의 경우,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데 있어 역내 각국의 경제수준의 격차로 인한 모순과 갈등이 내재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동북아의 경우 지역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권력적, 이익적, 지식적 장애물은 심지어 지역협력레짐의 구축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국가간 협력을 통해 공멸의 상황에 대비하는 환경, 에너지 분야와 함께 공동의 이익이 비교적 명확하게 표출되는 교통물류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과 함께 실현 가능성을 도출해볼 수 있다. (이 글의 전문은 <http://www.krlove.net/> 커뮤니티-북한 관련자료실의 공공기관 연구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 북한, ‘평양에서 오라은행 개업식 실시’ 보도

○ 12.15. 평양방송은 “오라은행 개업식이 16일 평양에서 있었다”면서 “개업식에는 오광철 무역은행총재, 신봉철 재정성 부상 등과 나기브 씨위리스 총사장을 비롯한 이스마일 후세인 대사와 에젤딘 헤이칼 오라은행 총재가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방송은 “나기브 씨위리스 총사장은 오라은행의 개업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은행이 에집트 인민과 조선인민 사이의 이해와 친선관계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